

# 멈춰선 연금개혁... 연기금 운용수익·지방선거 표심 '축각'

여·야 연금개혁 방향성 놓고 견해차 선거이후 관련 논의 가속화 전망 노인빈곤·세대 간 형평성 등 쟁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전인 만큼 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와 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거 이후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들은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만큼, 견해차가 뚜렷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활동 기간도 민간자문위가 실패한 이유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연금특위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뉴스시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2023년 기준 13%)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3월 단행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 대체율 인상)의 배경에도 이같은 여·야간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다만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은 노후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재설계하면 특정 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온 이유다.

지난해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

이다. 4%포인트(p)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존의 2056년보다 소진시점이 8년 늦어졌다. 연 평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7년 더 늦춰지지만, 운용 수익은 고정된 수입이 아닌 만큼 연기금은 40년 내에 소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소진 위기를 겪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이 한창이었던 지난 196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 수)은 6.1명이다. '2차 베이비붐' 당시인 1970년에는 4.5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했다. 불과 30년 뒤인 2056년에는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83.9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두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노인빈곤'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약 39.7%다. 노인 10명중 4명이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미

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청년세대가 그 재정을 감당해야하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그 예로 올해 만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넌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지만,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수익비는 1.7배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면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 간신히 돌려받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연금개혁이 노인빈곤과 세대간 형평성 등 쟁점을 남겨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의 재정정을 주문하면서,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李 대통령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기사 공유 인권침해·역사왜곡 등 대응 시사

스타벅스코리아의 '뱅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조롱과 혐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와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사회적 참사나 국가 폭력 등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이용자들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봉하마을에서 고인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지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일베는 2010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인기 게시물을 모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극우 성향·남성 중심 커뮤니티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는 '빔(Be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me·유튜브 콘텐츠)을 유행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빔'이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세월호 참사, 5·18을 조롱하는 특정 단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베는 쇠퇴한 지 오래", "언젠가 일베냐"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는 본질과 먼 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베에서 만들어진 빔'은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스타벅스코리아의 '뱅크데이' 이벤트에도 비판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악자 혐오, 인권 침해, 역사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베와 같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다.

다만, 이 당시에도 법률적 한계가 있어 폐쇄는 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에 따라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해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국회에서 거듭 무산되었던 혐오표현 규제 입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과제"라며 "혐오 콘텐츠를 방지·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홈플러스, 본사·대형마트 등 잔존사업도 판다

유통산업 침체 속 인수자 나올지 미지수

홈플러스가 핵심 우량 자산이었던 슈퍼마켓(SSM)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 데 이어,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포함한 잔존사업 부문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자,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 본사 등을 포함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 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는 익스프레스 매각 당시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최근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공식 티저레터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추진된다.

앞서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체 사업부를 한 번에 넘기는 통매각을 희망했으나, 막대한 인수 비용과 대형마트 업황 둔화 부담 탓에 원대지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던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떼어내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에 매각하는데 성공했지만, 매각대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기는 계속됐다.

현재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달 월급을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자금난 우려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7월 3일까지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고강도 구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뉴스시

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브릿지론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메리츠 측이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가 없는 제3의 기업이 인수할 경우 단숨에 국내 대형마트 3위 사업자로 도약하고 온라인 채널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대형마트 본체를 인수할 만한 역력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감한 점도 걸림돌이다. 과거 홈플러스 측은 보유 부동산 자산을 4조 8000억 원대로 평가했으나, 최근 메리츠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62개 점포의 부동산 가치는 1조 5000억 원대로 과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매각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

